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의 1년을 돌아보며...



이원형

한나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상임위원)

최근 한나라당에서 「건강보험재정파탄대책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위원장에 임명되어 당내의 의견을 조율하고 당론을 정립하기 위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단체간의 토론형식으로 다양한 모임을 주선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전대미문의 의료대란 파동과 약사법 개정·재개정 과정의 파문을 겪어오는 동안 어느덧 우리 보건정책의 허실을 알게 되었고, 그 변화의 과정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준비하지 못한 정책을 선부르게 시행함으로써 야기된 혼란들을 체험하면서 위정자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무겁게 깨닫게 된다.

요즘 우리사회의 주제는 단연 '건강보험재정파탄 문제'

요즘 우리 사회의 주제는 단연 '건강보험재정파탄 문제'이다.

연일 신문과 방송보도의 1면을 장식하는 관련기사 중에 사태의 본질을 지적하는 論者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사는 사태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혹은 정리되지 못한 채 여론을 탐색하듯이 발표되는 정부의 미봉책 대안들 뿐임을 발견하고 씩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올해의 적자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12월의 평균적자 규모가 4,877억 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5조 8천 억원의 적자가 생기리라 예상되지만, 3월 들어 적자 규모가 2,270억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예측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공·교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분(1,357억원)이 반영된 점과 재정파탄 보도 이후 요양기관 의 소극적 청구행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4월의 재정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3월의 적자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적자 규모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 중 보험료 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 시의에 따른 일시적인 대책들은 그 규모를 근거로 하여 인상을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 5월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논거는 이 점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의 진솔한 자세가 절실히 필요

필자는 이 시점에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인에 대한 진단없이 대책을 수립하여 또다시 혼란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솔한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정책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올해의 적자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12월의 평균 적자 규모가 4,877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5조 8천억원의 적자가 생기리라 예상되지만, 3월 들어 적자 규모가 2,270억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예측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공·교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분(1,357억원)이 반영된 점과 재정파탄 보도 이후 요양기관의 소극적 청구행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및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의약품 물류시스템 정비, 약효동등성 확보 대책과 의약품 분류의 명확화, 정확한 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모형 개발, 이해 관계자간 이견 조정을 위한 조정·합의 기구 설치, 건강보험공단의 유기적 통합 완성 등 심사물량 증가에 대비한 심사평가원 조직개편, 의약품 유통센터와 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통합 전신망 구축, 선심성 급여확대 부문의 점검과 보완대책 수립, 적기 재정분석을 위한 종합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급여청구의 투명성과 간소화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진료비 적정성 심사와 사후관리 대책수립 시급

으로 인해 이토록 혼란을 자초했다면 지금이라도 마땅히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점검하고,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리라 여겨지면 비록 대통령 공약일지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책의 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자세가 진정한 공복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제도적인 준비와 행정적인 준비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며 제도적 준비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및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의약품 물류시스템 정비, 약효동등성 확보 대책과 의약품 분류의 명확화, 정확한 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모형 개발, 이해 관계자간 이견 조정을 위한 조정·합의 기구 설치, 건강보험공단의 유기적 통합 완성을 들 수 있으며, 행정적 준비로는 심사물량 증가에 대비한 심사평가원 조직개편, 의약품 유통센터와 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통합 전신망 구축, 선심성 급여확대 부문의 점검과 보완대책 수립, 적기 재정분석을 위한 종합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급여청구의 투명성과 간소화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그리고 진료비 적정성 심사와 사후관리 대책수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제도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무엇보다도 수십 년동안 아니, 수백 년간의 관행을 변혁시키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시행을 하려면 위와 같은 준비상황 점검은 물론, 크고 작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조정하고, 국민들이 제도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학계와 관계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부의 독단

적인 태도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정부가 여론을 앞세워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냈던 일부 학자와 단체를 반개혁 수구세력으로 몰아부치거나 건설적 의견을 내는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등 얼마나 억압적이고 강하게 밀어부쳐 왔던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해 놓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제왕적 제도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아 왔다.

여론을 일시적으로 호도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은 결코 영원히 속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또 다시 미봉책의 남발이나 밀어부치기식 정책집행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필자는 여론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지만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방향도 폭로식의 건수 중심 의정활동이 아닌 사안별 원칙을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노력하려 한다.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위시한 의료보건정책 전반에 걸친 극심한 혼란이 하루 빨리 수습되어 환자와 의사, 의사와 약사, 약사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관계자 및 국민과의 관계가 믿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료보건 환경이 구축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보건복지 상임위원으로서 이런 사회구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겠다는 다짐을 되새겨 본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시행을 하려면 준비상황 점검은 물론, 크고 작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조정하고, 국민들이 제도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